



3면

"H국우 세력 논리로 일본 대변"

전주매일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음 3월 7일) 제325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특별법, 연내 전부개정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 관한 특별법〉

생명경제 비전 중심
생명산업 육성 등
5대 분야 특례 담겨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전북도는 25일 김관영 도지사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한 특례들을 담고 있다.

준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전북이 비전과 특례를 이치럼 빨리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 제정 직후, 도·시군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이 연합한 특례사업 발굴 전담 조직이 가동되어 충격을 다한 결과로 풀이된다.

도는 이날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추후, 정부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도에서 발표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담겨있다.

먼저,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약 10만여 일자리를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의 경우, 적자생존 방식의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 개정안 등 비전에 브리핑을 갖고 있다.

것이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원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오는 2040년 현재 인구의 10%인 구유입 기업유치 1,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함으로써 현재 도내 11개 시·군에 설정된 인구감소·관심지역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다.

규제 해소와 필수 의료 제공 등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자치권 강화' 분야는 인적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례 발굴을 위해 비쁘게 움직여 왔다. 오늘 발표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다"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떤 벽과 장애물 앞에도 절망하지 않고 도민 여러분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도민의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특별법 전부 개정안
6월 특자도 시행 앞둔
강원도 사례 참고
법령 충돌 줄이기 작업도

특자도 국민지원위
출범식, 5월 3일 개최

한편 전북도는 이번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오는 6월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는 강원도가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할 당시 중앙부처를 패스한 뒤 곧바로 국회를 통한 개정안 추진으로 인한 리스크 감소를 위해 중앙부처와의 우선 협의를 강조했다.

또 도는 강원도가 특례를 추진할 당시 상위법과의 충돌, 이른바 법령 충돌을 줄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겸 정책기획관은 "국조상에 제출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은 발굴 특례를 국회 입법조사처 등 전문가를 초청해 4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출력을 하나 하나 다 검토했다"면서 "상위법과의 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강원도는 부처협의가 우선하지 않고 의원발의를 먼저 했다"면서 "강원도가 일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다수의 미숙함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특자도과가 국조실 소속으로 편성된 만큼 (우리는) 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조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실행시키겠다"면서 "국회 단계에서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총 동원해 설명을 하고, 의견이 반영되고 투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법국민 홍보와 민간위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루어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5월 3일에 출범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

/김재훈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취재기자(군산)	"	"
지역취재기자(완주)	"	"

▲ 접수기간 2023년 4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청년 창업가 자립 돕는다

도,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 지원... 전북신보 등과 협약
8년동안 이자 2.8%,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북도가 청년 창업가의 자립을 돕고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25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 전북은행과 함께 '전라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은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해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대출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상환방식은 8년간 거치 방식과 분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상환에 대한 압박감도 줄어줄 예정이다.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이자 중 28%를 이차보전 지원하며,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청년 창업가가 25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전북도는 25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 전북은행과 함께 '전라북도 청년창업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절차를 거쳐 지원된다. 김중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창업 초기 대출을 받기 힘든 청년 창업자에게 자금 부담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청년의 창업 수요를 늘리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